

영농폐비닐수거 인센티브 군비 추가지급

임기구분	임기 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임기 후 <input type="checkbox"/>	사업성격	신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 <input type="checkbox"/>	사업주체	국가 <input type="checkbox"/> 군위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광역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 <input type="checkbox"/>
예산구분	예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예산 <input type="checkbox"/>	예산재원	국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시도비 <input type="checkbox"/> 군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민자 <input type="checkbox"/>	총사업비	85백만원
담당부서	환경과 김영숙 폐기물관리팀장 박현호 담당자 임준화(☎7947)				

< 공 약 목 표 >

- ◆ 영농폐비닐 수거 인센티브 군비 추가 지급을 통한 쓰레기 적기 처리율 제고 및 주민참여 유도
- ◆ 깨끗한 농촌 정주환경 조성

필요성 [추진배경]

- 우리군은 농촌 지역으로 영농폐비닐이 대량 발생하여 환경오염 우려 상존
- 수집보상금 외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의 적시 처리율을 제고하여 농촌 생활환경개선 필요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위 치 : 군위군 전역
- 사업내용 : 영농폐비닐수거 인센티브 지급(연2회 : 6월, 12월)
- 사 업 량 : 폐비닐 1,700톤 정도
- 사 업 비 : 17백만원(군비 17)

※ 지급기준

구 분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	비고
수집보상금	140원/kg	100원/kg	60원/kg	-	
국비 인센티브	20원/kg	20원/kg	20원/kg	-	
군비 인센티브	10원/kg	10원/kg	10원/kg	-	추가지급

□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구분	총 사업비	기투자 (임기전)	재원 투자계획						2026년 상반기이후 (임기후)
				소계	2022 하반기	2023	2024	2025	2026 상반기	
계		85	0	68	0	17	17	17	17	17
농촌폐비닐 수거 인센티브 지원(자체)	국비	0	0	0	0	0	0	0	0	0
	시도비	0	0	0	0	0	0	0	0	0
	군비	85	0	68	0	17	17	17	17	17
	기타	0	0	0	0	0	0	0	0	0

□ 연도별 추진계획

연도별		추진내용
기 추진		▶ 폐비닐 수집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(국비)
임기내	2022년	▶ '23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
	2023년	▶ '22. 12. 1. ~ '23. 11. 30. 폐비닐 수집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(6월, 12월)
		▶ '24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
	2024년	▶ '23. 12. 1. ~ '24. 11. 30. 폐비닐 수집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(6월, 12월)
		▶ '25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
2025년	▶ '24. 12. 1. ~ '25. 11. 30. 폐비닐 수집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(6월, 12월)	
	▶ '26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	
2026년	▶ '25. 12. 1. ~ '26. 5. 31. 폐비닐 수집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(6월)	
임기 이후		▶ '26 하반기 수집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(12월) ▶ '27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확보

□ 예상 문제점 및 대책

- 지역 특성상 영농 종사원의 고령화로 농경지 수거에 어려움 많음
- 마을단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부족(부지미확보)으로 도로변 방치 폐비닐로 인한 경관훼손 및 도로교통 장애 등 안전 위해요인 발생
- 이물질(끈, 돌, 모래, 흙 등)이 과다하게 포함된 폐비닐의 수거 기피 (선별 시간·인력투입, 기계고장, 약품사용 등으로 생산비용 증가)
- 공익직불제와 연계한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지도 및 홍보

□ 기대효과

-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